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안)

2011. 3.



행정안전부

목 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1. 추진배경	1
2. 필요성	2
3. 해외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3
II.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4
1. 비전 체계도	4
2. 추진전략	5
3. 추진방향 및 5대 아젠다	6
4. 5대 아젠다별 성과지표	7
III. 5대 아젠다 및 추진과제	8
1.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8
2.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12
3.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 워크 활성화	17
4. 소통 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21
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26
IV. 소요예산 및 향후 계획	33
V. 추진체계	34

1. 추진배경

- UN 전자정부 평가 1위('10년)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청사진 필요
 - 2000년 이후 범국가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한 결과, 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로 도약
 - ※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및 전자정부 발전 최고 단계인 4단계(Connected) 62% 달성 등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
-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 대응, 더 나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전략 마련 시급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급속 보급으로 촉발된 모바일 환경은 타 기술과의 융합으로 더욱 지능화되고 스마트한 서비스가 가능
 - ※ 스마트폰 사용자가 '10년 6백만명에서 '11.3.23일 천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2천만명 돌파 예상
 - 스마트 IT는 국민의 생활양식, 일하는 방식, 사회문화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적용방안 마련 필요
 - IT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을 넘어,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수단으로 진화 중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5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 필요성

①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기존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략(Catch-up)에서, UN 전자정부 1위로서 지속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는 전자정부 선도 전략(leading) 필요
 - ※ UN 전자정부 순위 : 13위('03년) → 5위('05년) → 6위('08년) → 1위('10년)
-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은 더욱 확산되고, IT 기술은 더욱 지능화되며 타 분야와 융합되는 추세
 - ※ 모바일 환경은 클라우드 컴퓨팅, 웹2.0/웹3.0, 3D, 위치기반서비스(LBS), 증강현실 등 타 IT기술과의 융·복합 촉진

②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녹색성장 추구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대책 시급
 - ※ 미래사회 변화의 선제 대응 및 해결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부각
- 미래사회는 사회안전과 복지 증대, 배려·나눔 확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등 인간·가치·감성이 중심이 될 전망
 - ※ 정부 예산 중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09년 : 26.2%(74.6조) → '10년 : 27.8%(81조) → '11년 : 27.9%(86.3조))

③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

-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시간·장소·매체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다소 미흡
- DDos/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 발생, 정보격차 확대 등 신규 IT 환경에서도 정보화 역기능이 지속적 발생
- 중복투자 등 정보자원의 운영효율성이 낮고, 대기업 편향·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등으로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미흡

3. 해외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 주요 해외 국가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혁신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미국) 정부내부 혁신과 국정목표 달성 수단으로 전자정부 추진
 - 대통령의 국정철학 행동계획을 담은 '열린정부 계획'('09년)에 따라 효율성·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자정부 추진 중
 - ※ 4대 전략 : Transparency(투명성), Open(열린정부), Cost Savings(비용절감), Securing IT systems & Expanding Broadband Networks(보안 및 네트워크 강화)
- (EU) 유럽 발전전략(EU 2020, '10.3월)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ICT활용 전략으로 '디지털 아젠다' 발표('10. 5)
 - 에너지·환경 등 ICT를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 사이버 신뢰 및 보안 증진, 공공정보 활용·공유 확대 등 스마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통합 성장을 목표로 제시
- (영국) IT기반의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디지털 영국'을 목표로 하는 「정부 ICT전략」 발표(2010.1)
 - 더욱 스마트(Smarter)하고 저비용(Cheaper)이며 친환경적(Greener)인 공공부문 ICT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 ※ 공공부문 네트워크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데이터 센타, 공공 서비스 공유, 정보보안과 인증, 표준화 및 그린ICT, 역량강화 등
- (일본) 신기술과 경기불황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 중심의 디지털 안심활력 사회 실현을 위해 「i-Japan 2015」 발표('09년)
 - 디지털 기술로 경제·사회 전체를 개혁하여 새로운 가치 창조와 혁신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을 위한 3대 중점 분야를 제시하여 추진 중
 - ※ 3대 중점 전략 : 전자정부/전자지자체(전자사서함 확대 등), 의료/건강(원격의료기술 활용 및 지역의료 연계 등), 디지털 교육 및 인재 육성

Ⅱ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 비전 체계도



<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개념 >

- ◆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

2. 추진전략

① (공개 : Open) 공공 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

- 민간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 및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
-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서비스를 투명하게 공개

② (통합 : Integration) 수요자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
-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채널간 상호 호환 및 연계·통합 추진

③ (협업 : Collaboration) 조직, 부서간 협업 및 정보 공유

- 국민 중심의 선제 행정, 맞춤형 행정, 현장 행정, 융합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간 협업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까지 협업 및 공유 범위 확대
-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조직·부서간 협업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문화 및 제도의 정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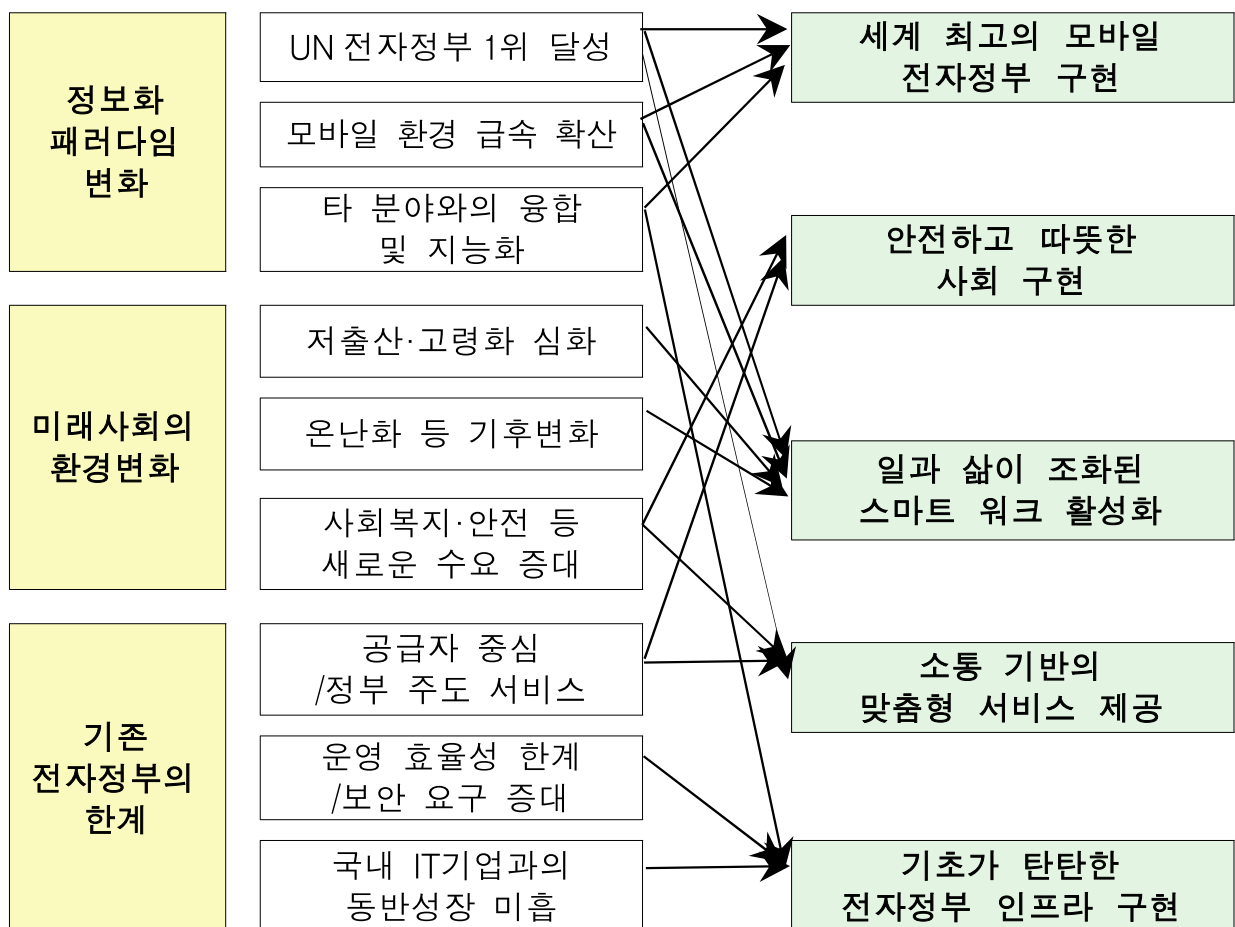
④ (녹색정보화 : Green) 친환경적 및 저비용 시스템 구축

- 그린 IT제품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한 IT시스템의 그린화
- 스마트 IT를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3. 추진방향 및 5대 아젠다

- ① (선도) IT 신기술을 활용,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 모바일 전자정부 조기 구현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 선도
 - IT 기술과 서비스간 융·복합으로 글로벌 전자정부의 위상 공고화
- ② (고도화)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서비스의 수준 제고
 -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재난·안전·복지 등 새로운 국민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
- ③ (인프라 강화) 기초가 탄탄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전자정부 이용 환경 구축
 - 국가정보자원의 운영 효율화 및 전자정부 추진 역량 강화

<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의 5대 아젠다 >



4. 5대 아젠다별 성과지표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유무선 통합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실현 ⇒ 모바일화 가용 서비스 100% 달성('15) ⇒ 공공정보 민간기관 제공률 : 14.8%('09) → 50%('15) ⇒ 무선네트워크 속도 : 1Mbps('10) → 100Mbps('15)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안전, 복지 등 안전하고 따뜻한 국민생활 실현 ⇒ 5대 범죄 검거율 : 82.25%('09) → 90%('15) ⇒ 위해식품 회수율 : 34%('09) → 45%('15) ⇒ 재난 인명피해 사망자 감축 : 30%('11) → 50%('14)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워크 활성화	○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Work smart)으로 전환 ⇒ 정부효율성(IMD) : 26위('10) → 10위권('15) ⇒ 스마트워크 근무자 비율 : 4.7%('10) → 30%('15)
소통기반의 개인맞춤형 서비스	○ 소통·맞춤·개방의 국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 ⇒ 온라인 참여지수(UN) 세계 1위 유지 ⇒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 63점('10) → 75점('15) ⇒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 61%('10) → 70%('1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비율 30% 달성('15) ⇒ 정보보호 지수 : 73.9점('09) → 80점('15) ⇒ 정보격차 지수 : 30.3('09) → 20('15) ⇒ 정보문화 지수 : 66.2점('09) → 75점('15)

Ⅲ

5대 아젠다 및 추진 과제

1.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추진 필요성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기존 PC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필요
- 모바일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보안성 확보, 부처별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한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 필요
- 모바일환경 확산, 수요자의 프로슈머(Prosumer)화 등으로 공공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요구 증대

※ 공공정보의 민간기관 제공률은 14.8%, 공개서비스는 13종으로 제한적('10년)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PC기반 서비스	모바일 완결 서비스
단방향 · 획일적 방식	양방향 · 다채널 방식
반응 행정 · 불편적 서비스	선제 행정 · 맞춤형 서비스
제한된 공공정보 · 서비스 공개	전면적 공공정보 · 서비스 공개

□ 추진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1)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2) 모바일 기반 혁신적 전자정부서비스 발굴 및 제공
	3)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현
②범부처 모바일 공통 기반·인프라 확충	1)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2)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보안 체계 및 법제도 정비
	3) 범부처 모바일 서비스 센타(MSC) 구축
③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3)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 측정 및 개선 지원

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1)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 범부처 모바일 웹/앱의 접근성·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국민 맞춤형 모바일 전자정부 포털(m.korea.go.kr) 구축
 - ※ 사용자 편의의 맞춤메뉴 구성, 소셜미디어 연동 등을 통한 Gov 2.0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PC기반 주요 대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모바일 통합 서비스로 단계적 전환
 - ※ 초기부터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로 기획·설계 후 서비스 구축하되, 각 기관별·기능별 웹사이트들의 단순 모바일 전환은 지양

2) 모바일 기반 혁신적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 및 제공

- 모바일 기기의 특성(이동성·위치기반·실시간성 등)을 활용한 개인화된 혁신적 대국민 서비스 발굴·추진
 - 민원, 안전, 복지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크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전국 단위의 다수기관 연계서비스를 우선 추진
- ※ 위치정보와 카메라 기능이 결합된 생활민원 불편사항 신고, 증강현실이 적용된 인근 행정기관 찾기, 전자발급 민원서류 진위 확인 등

3) 모바일 행정업무 환경 구현

- 모바일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모바일 오피스 구현
 - 이동 중 메일, 메모보고, 전자결재 등 내부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구현 및 확산
- ※ '10년 행안부 대상 시범 적용 후, 전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확산
- 행정기관의 현장단속 등 현장지원 업무모델 발굴 및 확산
 -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옥외광고물 조사업무, 시설물 관리, 복지·치안·방재 등

② 범부처 모바일 공통 기반·인프라 확충

1)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100Mbps 네트워크 속도가 가능토록 광대역무선망 고도화
 -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장소의 와이파이(Wifi) 확대
- 안전하고 실용적인 국가무선망 구성 및 이용제도 마련
 - 효율성·안전성을 보장하는 국가기관 전용의 무선인프라 구성 및 정부서비스 접속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무선이용제도 마련
- IPv4 주소 고갈에 대비, 무선 네트워크 및 기기에 Mobile IPv6 적용

2) 모바일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보안 체계 및 법제도 정비

- 보안위협이 높아지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선제적인 보안정책 수립
 - 스마트폰 도난·분실, 악성코드 감염, 무선구간 해킹, 업무망 접속 등의 보안대책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모바일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m-Gov 추진을 위해 기존 PC기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속성 정의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이슈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3) 범부처 모바일 서비스 센터(MSC) 구축

-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 및 중복투자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공동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공통기반 및 인프라 구축
 - 통신, 보안, 시험·검증, 관리, 인증, 연계 등의 모바일 공통기반 마련
 - 모든 부처가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정 서비스 관련 기술규격 및 지침 마련
- 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다채널간 데이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간 상호 호환 및 다채널 서비스 단계적 추진(n-Screen 대응)

3]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1)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공공정보 안내·검색·다운로드 및 공공서비스 재사용이 가능한 국가 공유자원포털 구축(data.go.kr)
- 민간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토록 표준화된 접속방식(Open API)으로 공공정보를 개방
 - ※ 기상·교통·관광 등 상업적 활용도 높은 100대 공유서비스 선별·제공(∼'13년)
- 민간과 공동으로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등 개최

2)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토록 법령 개정 및 지원 강화

-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법적 근거 마련(저작권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 법령개정 전에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토록 기관협조 요청 및 국가정보화수준평가 등에 가점 부여
- 공공정보 제공범위 및 방법, 저작권 관리 등 공공정보 제공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정보 이용신청 접수, 보유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오류 측정 및 개선지원

- 공공정보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방법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주요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 ※ 공공정보의 데이터 오류율 6.7%(KDB,2009)을 민간수준(2%)으로 개선

2.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 추진 필요성

- 재난재해, 생활안전사고, 식품사고, 가축전염병 및 흉악범죄 확산 등으로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협**

※ 생활안전사고 : 272천건('07) → 292천건('09)

※ 5대 강력범죄 : 522천건('07) → 590천건('09)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스템, 예산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복수급 등 복지전달체계 비효율 발생에 따른 대응 필요

※ 정부 복지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 : '09년 26%(74.6조) → '10년 28%(81조)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신속대응/사후조치 위주 안전관리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부처별 안전 행정	범부처 통합된 안전서비스
공급자 위주 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 추진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 실시간 지능형 공공 안전망 서비스 제공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 선제적·예방적 국가 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3) 국가영상정보자원(CCTV)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②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1) 식품,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체계 확립 2) 사람, 가축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 마련
③ 수요자 중심의 국가 복지시스템 선진화	1)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2) 나눔활동, 복지바우처 등 개별 복지시스템 선진화 3) 다문화가정 종합지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

① 실시간 지능형 공공안전망 서비스 제공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강력 범죄 대처 및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형 범죄예방체계 구축
 -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정보 등에 대한 범죄지도 구축·공개
 - 학교주변 성범죄자 출몰 또는 보호관찰지역 이탈 시 관할 일선 경찰서에 실시간 전송
- 경찰청, 보건복지부, 공공·민간단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미아·실종자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미아·실종자 수사에 효과적 대응
- 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 단말기를 활용, 위급상황시 위치 확인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도입
 - ※ '11년초 시범운행을 거쳐 '11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댁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u-응급구호체계 확대
 - 대상자의 활동량 감지 및 응급 호출, 화재·가스 감지, 맥박 정보 점검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응

2) 선제적·예방적 국가 재난 통합대응체계 구축

- 분석 및 예측 기반의 선제적 재난관리와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국가 재난재해 통합 대응 체계 구축
 -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와 유사재난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시스템 마련 병행 추진

- 민방위 경보발령, 재난전조정보 수집(제보 기능), 재난상황 메시지 전파 등 신속한 재난상황 다채널 전파체계 구축
 - 119신고자 위치·동네 화재정보·소방시설 등 Map에 표시, 화재증명 발급, 각종 안전점검 및 피해조사 현장처리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침수, 산사태 등 재난취약지점에 센서, CCTV 등 설치, 스마트폰 기반 모니터링·대응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의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자동 통보매체를 위성 통신, 스마트폰 등 다채널로 확대
- 기존 재난 대응체계를 3D 기반 관제시스템으로 전환
 - 도심 건축물에 대한 3D 통합정보와 재난 발생 사전 대비를 위한 재난 주제도 구축 및 3D 기반 입체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범정부 기상관측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27개 기상관측 기관의 기상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국가적 기상재해 감시·대응과 기후변화 관련 범부처 역량 강화

3) 국가영상정보자원(CCTV)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기관별·목적별 CCTV 영상정보자원에 대한 범정부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영상정보 대수, 목적 등 맞게 단계적 연계·통합 추진
- 영상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
 - 기관·지역·권역별 활용도와 댓수 고려, 적정 통합관제센터구축
 - ※ '15년까지 230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CCTV 28,579대 확충
- 범정부 공동활용 추진체계 정립, 표준화, 관련기술(영상정보 가공기술, 모션인식기술 등) 개발 추진

② 국민건강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1) 식품, 농축수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체계 확립

- 식품, 농축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정보체계 구축
 - 농림부, 식약청 등 개별 기관별로 관리되던 식품, 농축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추적·회수하는 **통합이력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코드 표준화 및 식품안전정보 공동활용 확대
- 스마트폰 기반 먹을거리 안전정보 제공
 - 스마트폰으로 식품, 농축수산물에 부착된 바코드와 RFID칩을 인식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제품과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2) 사람, 가축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 마련

- 가축 및 수산물 질병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질병 관리 전과정(예방, 예찰, 진단, 통제, 사후관리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시간 이력관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 ‘10.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348만마리 가축이 매몰되고 약 3조원의 피해 발생
 -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 후, 수산물 등 먹을거리 전체로 확대하고, 식품/농축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체계와 연계 추진
- 전염병 조기 경보망 구축 및 신속대응체계 마련
 -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여 전국 전염병 발생상황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신속한 전염병 발생 및 예보 정보를 제공
- 지능형 공공의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진료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및 원격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의료정보 전달체계 혁신

③ 수요자 중심의 국가복지시스템 선진화

1)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 다부처 복지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한 자격검증체계 구축
 - 부처별·사업별로 운영 중인 복지정보를 범부처적으로 연계·통합하여 개인·가구별 복지급여의 자격심사 등에 공동 활용
 - 쌀직불금, 유류비 보조 등 모든 복지예산에 대해 사용자 및 혜택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검증시스템 구축
- 개인별,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정부·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최적의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선제적 제공

2) 나눔활동, 복지바우처 등 개별 복지시스템 선진화

- 민·관 나눔활동을 연계한 종합정보망(나눔 포털) 구축
 - 기부, 자원봉사, 식품 등 나눔활동에 대한 온라인 접근 통합 창구 구축
 - ※ 포털을 통해 기부자가 직접 기부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선택하고, 기부금품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포털에 상시 공개
- 범부처 복지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보급
 - 부처별로 수행중인 복지바우처 서비스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3) 다문화가정 종합지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다문화가정 지원시스템 구축
 - 한국어와 한국문화소개, 생활정보 등 다국어 교육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멘토링제도 운영 등과 연계 추진
 - ※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상시 실시, 온라인 교육 강화 등

3.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 추진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하는 방식 선진화, 일과 삶의 균형 등 선진국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 대두
- 스마트폰, 원격영상회의 등 IT환경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현 가능
- 스마트워크 활성화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Work Hard’에서 ‘Work Smart’로 전환하고,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 필요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사무실 근무(PC 기반)	위치 무관(스마트워크&모바일오피스)
업무는 현장, 기록은 본부에서	현장에서 실시간 업무처리 및 기록
부처간 제한적 업무 협업	기관간 경계없는 전면적 업무 협업

□ 추진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1) 스마트워크 센타 도입 및 확산
	2) 원격영상회의 및 통합커뮤니케이션 구축
	3) IT기반 모바일 및 재택근무 활성화
②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1) 공공분야 법제도 기반 조성
	2) 민간분야 확산 기반 마련
③ 지식기반 기관간 디지털 행정협업 (융합) 구축	1) 기관간 행정협업 지원시스템 구축
	2)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4) 스마트 IT와 융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

① IT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및 확산

1) 스마트워크 센터 도입 및 확산

- 수요 밀집지역 및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 중심(ex : 대도시 외곽 중심 등)으로 스마트워크센터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 도입
- 공공부문 및 민간분야에 스마트워크센터 확산
 - 현장 수요에 맞게 기본형, 회의형 등으로 공공모델을 세분화하여 특화 운영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모델을 개발
 - 스마트워크 운영상 애로해소 및 개인상담 등을 위한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15년까지 총 500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정부 50개, 민간 450개)

2) 원격영상회의 및 통합커뮤니케이션 구축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공용 실감형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행정기관 세종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 스마트TV 등을 활용한 회의 유형별 원격영상회의 솔루션 개발 및 보급
- ※ 공공부문 표준모델 개발('11년) → 적용 범위 확대('12년 이후) 추진
- 스마트워크 센터 이용자를 위한 통합커뮤니케이션 구축
 - PC, 전화, 스마트폰 등을 연계하여 이용자 커뮤니티 마련 및 시설 예약, 회의실 사용, 이용시간 점검 등 서비스 제공

3) IT기반 모바일 및 재택근무 활성화

- 모바일 전자정부와 연계한 모바일 근무 환경 구현
 - 범부처적 표준모델 확립 및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까지 단계적 확대
- 보안환경 강화 등 재택근무 환경 지원
 - 사용자 인증 고도화, 자료보안 및 보안규정·절차 강화 등 재택근무 보안환경 마련

② 조직·인사·복무 등 스마트워크 기반 조성

1) 공공분야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 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개선
 - 유아·노인 부양자, 장애인 등의 스마트워크 참여 보장, 우수 인력에 스마트워크 우선 실시 등
- 직무분석 및 적합업무 발굴
 - 부처별 스마트워크 대상 직무를 발굴하여 개별·독립적 업무에서 협업 필요 업무로 점진적 확대
 - ※ (예시) 미국 총무청(GSA) 공무원 중 86%, 행안부 업무 57% 스마트워크 가능 등
- 인사제도 개선 및 평가/이용활성화 추진체계 마련
 - 스마트워크 근무자에 인센티브 부여, 스마트워크 추진실적 부서장 평가 반영 등 추진
 - 각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스마트워크 활용도를 지수화·대외 공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스마트워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2) 민간 분야 확산 기반 마련

- 공공분야 성공사례 발굴, 대국민 홍보 및 스마트워크 문화 보급 추진
- 포럼 구성 및 운영, '스마트워크 대상' 제정 및 시행, 자발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유도 등 추진

③ 지식기반 디지털 융합행정 체계 구축

1) 기관간 행정협업 지원시스템 구축

- 범정부 디지털 행정협업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확산
 - 다부처 협업과제를 관련 기관 및 담당자가 공동 수행하는 사이버 공간으로서 과제관리, 이슈 대응 등의 협업 지원
 - ※ 협업 참여자들의 업무 관련 정보를 과제별 공간에 집적시켜 공유/활용하고, 행정협업과정에 필요한 지식, 정책정보, 업무정보 등에 검색 기능 제공

2)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외교통상, 범죄정보, 부동산, 주민, 주소 등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발굴, 단계적으로 확대

<분야별 행정정보 공동활용(예시)>

구분	주요 내용
외교통상정보	○ 범정부 차원의 외교안보·경제통상 관련 통합DB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간 공동 활용 및 협업 체계 구축
범죄정보	○ 법무부(검찰청, 출입국사무소), 경찰청, 관세청 등 범죄 대응 관련 기관간 범죄 및 범죄자정보 공동활용 추진
글로벌 기준 새주소체계 확립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 체계로 전환('12.1월) 적용 - 공적장부(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와 주소관련 행정시스템 적용
시설물정보	○ 건물 등 시설물에 국가표준ID를 부여하여 관련 정보간 상호 연계·활용

3) 스마트 IT와 융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

-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간 융복합
 - 토지, 환경, 산림, 농지, 문화재 등 국토공간정보 통합DB 구축
 - 구축된 통합DB를 지자체(시도, 시군구) 행정 업무에 전면 적용
- 행정서비스와 스마트 IT와의 융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4.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제공

□ 추진 필요성

- 그간의 정보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정보 유통 미흡으로 국정과 국민간 소통채널 부족
 - 국민의 정책 제기 등에 대한 환류기능이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의 온라인 제공 부족
- 국민과 기업의 참여·소통을 기반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및 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할 필요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정부가 지정한 방식 서비스	개인이 원하는 방식 서비스
제한적 기업지원 통합서비스	기업활동 주기별 통합서비스
부분적 개인 맞춤서비스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서비스
소통 및 협업 채널 존재	개인중심 소통, 협업, 환류 서비스

□ 중점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1) 소셜미디어 기반 참여·소통 채널 확대 2) 국가 정책 및 예산 집행 상황 실시간 공개 확대
②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 2)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③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1) 기업활동지원 단일창구서비스 확대 2) 글로벌 물류·무역망 연계 확대

① 투명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소통 채널 확대

1) 소셜미디어 기반 참여·소통 채널 확대

- 소셜미디어와 연계한 정부·국민간 쌍방향 공유·소통 환경 조성
 - 부처 공동으로 SN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SNS 활용법 교육, 매뉴얼 제작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 제고
- 국민 소리에 대한 온라인 소통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의 민원·국민제안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수립·집행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
-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발생한 행정결과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확대
-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대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수집 및 사업화, 제안 정책에 대한 보상,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적 절차 강화

2) 국가 정책 및 예산 집행 상황 실시간 공개 확대

- 국민이 관심 있어 하는 국가 주요 정책,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관심도 및 참여 유도
 - IT 분야 진행상황(dashboard)을 우선 공개하고, 국가재정상태, 4대강살리기, 세종시 이전, 복지 등 점진적 확대
- ※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국가 정책과 예산 집행상황을 공개하여 정부 투명성 확보
(미국 Recovery.gov, IT Dashboard 운영, 영국 www.hm-treasury.gov.uk/coins 운영)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채무·세입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위험등급별 위기경보

②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1)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

- 부처별·기능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개편하고 단계적 확대
 - 해당 과제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관련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 ※ 향후 5년간 23개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통합 추진

< 통합서비스(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국민생활정보 통합알림서비스	○ 세금 및 공과금의 온라인 고지, 납부 및 내역관리 등을 유무선 통합 기반으로 일괄 제공
나눔활동 활성화창구	○ 기부, 봉사활동 등 나눔활동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일괄서비스	○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 업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통합

2)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

-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민원서류 감축
 - 정부에서 보유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을 공공·민간까지 단계적 확대
- ※ '11년에는 공유정보 92종 → 120종, 공유기관 414개 → 435개로 확대하고, 감축가능한 서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 신속히 시행

- 온라인을 통한 인·허가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
 - 인·허가 가능여부를 스스로 알아보는 온라인 자가진단서비스 제공 및 대규모 비용수반 민원에 대한 온라인 사전심사시스템* 개발
 - *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온라인 사전심사·통보
 - 부처간 온라인 협의·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제공
- 개인정보 보호,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은 IC칩에 수록
 - ※ 주민등록법령 개정('11년), 시스템 구축('12년) 후 '13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급
-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 온·오프라인에서 본인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
 - ※ 법제화 및 시험운영('11년), 발급시스템 구축 후 본격 실시('12년)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 국민의 전자정부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는 정부 통합포털 구축
 - 전자정부서비스의 대표 접점(gateway)을 제공하여 모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제·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안내
- 전자정부서비스의 홍보 및 성과관리 강화
 - 전자정부 정책, 주요 서비스 등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용률/만족도 관리제** 도입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환류체계 마련
 - ※ 행안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고, 타 부처의 주요 과제로 확대 추진
- 주기적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연 2회 '이용률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 추진

③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1) 기업활동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확대

- 복합민원 일괄처리, 산업정보 확대 등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G4B) 확대
 - 기업활동 관련 복합민원(사업내용 변경 및 갱신, 창업, 폐업 등)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하고, 예산지원, 세제, 해외투자 등 기업 정보를 업종·주제·활동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제공
 - 중기청,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기업의 실적증명 자료를 통합하여 온라인 발급 및 제공
-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
 -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개방, 탄소배출량 관리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지원

2) 글로벌 물류·무역망 연계 확대

- 글로벌 국가간 물류·무역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
 - 물류정보포맷, 운송수단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통해 물류 주체간 물류정보 연계체계 강화
 - 통관, 수출입 대금결제, 화물정보 등 서비스 및 시스템별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 확대
- ※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중국, 일본, 미국, EU 등)를 우선적으로 확대
- 스마트 기기를 물류 업무 처리에 적용한 스마트 물류거점 및 운영시스템 구축 추진(ex :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항 등)

5.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 추진 필요성

- 그동안 국가정보화에 대한 지속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인프라는 취약
- 높은 외산제품 의존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기대 이하
※ 전자정부(1위) ↔ 글로벌 SW기업(삼성SDS 56위, 안철수연구소 361위)
- DDos/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 발생, 정보격차 확대 등 신규 IT 환경에서도 정보화 역기능이 지속적 발생
- 중복투자 등 정보자원의 운영효율성이 낮고, 대기업 편향·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등으로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미흡

□ 변화 모습

현재 (AS-IS)	향후 (TO-BE)
제한된 보편적 전자정부서비스	전면적 보편적 전자정부서비스
제한적 클라우드 인프라	공공분야 클라우드 환경 확산
유선 기반 정보보안 환경	유무선 통합기반 정보보안 환경
하드웨어 중심 정보화 역량	소프트웨어 중심 정보화 역량
정부주도 ICT 생태계	자발적 참여로 발전하는 ICT생태계

□ 중점 과제

과 제	세부 내용
①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환경 구축	1)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의무화
	2)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역기능 대응
②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구축
	2) 범정부 EA기반 국가정보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
③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 및 정보화역량강화	1) 전자정부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2) 스마트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효율화
④공공분야에 건전/공정한 ICT생태계 조성	1)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2)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⑤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 스마트폰 등 신규 IT 환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2)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3)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규제 강화

①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환경 구축

1)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의무화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 추진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웹표준 준수 의무화
- 웹표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외적으로 공표

2)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공평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 정보 소외·취약 계층(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접근 기회 제공 및 정보활용 능력 배양
 -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중고PC 보급, 웹 접근성 제고, 통신중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추진
-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및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 인터넷중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인증제 등의 운영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및 성인 보호관찰대상 사이버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지원·예방교육 실시
-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추진
 -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전략국가에 정보화 ODA 집중 지원 및 관련 정보화 노하우 전수
 - ※ '11년 정보접근센터 구축(4개소),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22개소) 등 단계적 확대

② 국가정보자원 운영 효율화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정부통합전산센터내 범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IaaS)
 - 중소형, 저 사용률의 서버를 고성능 서버로 단계적으로 통합
 -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노후장비 2,170대를 322대로 통합, 구축·운영비 등 4,300억원 절감(~'14년)
 - 일시적 HW 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Emergency Pool" 구축
- 정부업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서비스 발굴 및 확대 적용(SaaS, PaaS)
 - 범부처 공통 행정업무인 업무관리, 메일, 성과, 인사 등에 우선적 제공
 - 하드웨어 및 시스템소프트웨어(OS, DBMS 등)를 완성된 형태(pre-built)로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 기반의 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 통합전산환경 구축
 - 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여건에 맞는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자원 관리 효율화

2) 범정부 EA기반 국가정보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

- 범정부 EA 기반의 효율적 정보화 관리체계 정립
 - 정보화 최적화 방안 마련, 기획·구축·운영·평가 등 생애 전 과정에 적용
 - 시행계획 검토, 사전협의제 등 투자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자 방지
 - 범정부 EA 기반의 서비스 및 데이터 통합 기반 마련
- 국가정보화 분야의 체계적 투자관리방안 마련
 - 정보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투자관리 원칙 및 우선순위 정의
 - 경직성 경비 최소화를 통한 실질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확대 적용 및 글로벌 확산
 - 전자정부 사업의 사업자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를 단계적 확산 보급 및 활성화
 - 글로벌 교육 및 홍보, 국가대표 브랜드화, 수출 패키지화를 통한 해외 수출, 글로벌 전자정부사업 적용 등을 통한 글로벌화 토대 마련

③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정보화역량 강화

1) 전자정부 해외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 시장에 대/중소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상생 협력기반 마련
 -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유형별 세부 경험전수 분야를 선정한 후, 대/중소기업과 공동진출 추진을 적극 지원
-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확대로 해외 IT 서비스 시장 선점
 - 조달, 관세, 국세, 특허 시스템 등 전략상품 패키지화 및 다큐먼트화
 - 정부통합전산센터 수출모델 마련 및 국내외 홍보 확대
 - ※ '11년 전자정부 수출 2억불 달성 추진, 기재부 KSP 사업 등과 연계 추진
- 국제기구,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 글로벌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별 거점국가를 선정·전략적 지원
 - ※ 전자정부 등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구축, UN 공공행정 지식관리시스템 공동 구축 등 추진

2) 스마트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효율화

- CIO급, 보직자급, 사무관급, 실무자 등 담당자별 적합한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마련
 - 사업 기획, 사업관리, 중복 제거 등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정보화 역량을 우선적 개발, 법제도, R&D 발굴·관리 등으로 범위 확대
- 원격 협업, 스마트 워크 등을 위한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 모바일, 스마트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격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교육채널 구축
 - ※ 기존의 단순 동영상, 텍스트 위주의 일방적 온라인 교육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도구(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자적 질의, 즉석Poll 등)를 추가

4 공공분야에 건전하고 공정한 ICT 생태계 환경 조성

1) 공공정보화사업 관리 선진화

- 공공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한 Global Practice 선도 도입 및 적용
 - 다부처 연계·통합과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도입
 - Global Practice 적용 시범사업(지경부)과 연계·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선진 관리체계를 대형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지원서비스 제공
 - 분야(건축, 교통, 환경 등)별 전문 중소기업 육성, 기존 갑·을 관계의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을 통한 갑·갑의 발전적 관계로 전환
 -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도급제도, SW분리발주 등 중소기업 활성화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조사·보완
- 공공분야 SW 불법복제 방지 및 국산SW 사용 활성화
 - 정품 SW 사용 모니터링, SW 온라인 임대사용(SaaS) 활성화 및 저작권 침해 근절
 - GS 인증제품 도입 및 공개SW 확대 적용 등 공공분야 국산SW 사용 활성화

2)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공공 분야 IT 신기술 적용 및 미래사회 선도 사업 확대 추진
 - 공공 분야에 선도 적용 분야를 발굴하여 시범 구축하고, 평가 및 확대·발전체계를 확립하여 IT 신시장 창출에 대한 先순환구조 확립
- 공공 정보화사업 성과물 활용체계 마련
 - 정부가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도록 정보 시스템 성과물의 소유권, 개작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관계 개선
 - 우수 시스템 패키지화 및 사업결과물 영문화를 통해 해외수출 지원
- 건전한 ICT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 민관 연구소 및 학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기적 회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발전방안 수립 이행

⑤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 스마트폰 등 신규 IT 환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보보안 강화
 - 스마트폰 단말 분실시 정보 암호화, 원격제어 강화로 정보 유출 방지, 스마트 폰/TV 백신 보급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강화
 - 민·관 대응주체별 스마트폰 정보보호 역할을 정립하고, 대응 가이드 및 이용자 안전수칙을 마련
-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구축
 - 기관별·서비스별로 구축되는 사용자 인증·접근권한 관리기능을 통합·표준화된 인증체계로 구축하여 전부처에 단계적 보급
-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강화
 - 스틱스넷 등 주요산업시설 해킹공격 대응 보호체계 마련
-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인프라* 확충
 - * DDoS 공격 대피시스템, PC 해킹차단시스템 등

2)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 대전·광주통합전산센터 동시 기능 마비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중요 전산자원의 안전한 보호 구현
 - 대전·광주통합전산센터 상호백업체계에서 EMP*, 테러 등 인위적 위협에도 안전한 백업전용센터 구축
 - 제 3의 은폐된 장소에 벙커형으로 내구성이 강하도록 설계
- * EMP(Electromagnetic Pulse : 고출력 전자기파)

3)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규제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 ※ (대상 확대) 공공·민간 일부(51만) → 공공·헌법기관·민간 전체(약 350만개)
 - (처벌 강화)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 다수피해자 집단분쟁조정제,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 신설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제’ 도입 및 개인정보 유출시 경위·구제절차 등을 고지하는 ‘유출사실통지제’ 시행
- 공공정보화사업시 I-PIN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 * 정보시스템 구축시 개인정보침해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 예방

IV

소요예산

○ '11년 4,000억원 등 '15년까지 약 2조원 소요 예상

(단위 : 억원)

구분	'11년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350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1,200
일과 삶이 조화된 스마트 워크 활성화	350
소통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550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1,550
합 계	4,000

※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



구 분	주 요 역 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 전문위원회)	- 전자정부 현안 및 추진방향 설정 - 다부처 관련 전자정부 사업 및 이슈 조정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현안 해결 - 전자정부 지원사업 및 선도사업 추진 -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 운영(정부, 산학연, 민간 등)
각 부처	사업 추진 및 진도관리 등
정부통합전산센터	- 스마트전자정부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운영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문 기술 및 사업 관리 지원 - 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 실무 지원